



미래 경쟁력 준비를 위한 이주노동자제도 개선 필요

한건수(강원대 교수, 문화인류학)

설동훈 교수의 발제문은 현재 한국의 외국인력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며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설동훈 교수는 인권침해, 불법채류, 송출비리를 한국의 외국인력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하며 그 원인을 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에서 찾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기능직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저임금에 외국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연수취업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설동훈 교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35 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사회에서 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와 같은 미봉책으로 인력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더욱이 몇몇 논문에서 지적된 대로 연수제도가 이권단체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면, 현행 외국인력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입안되고 집행되는 인력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설동훈 교수가 분석한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책이 노동정책이나 산업인력구조 등 노동정책의 차원에서만 논의된 것에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노동자' 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다. 이들은 동료 한국인

노동자나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생활을 함께 하는 일반인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다. 즉 관리 대상이거나 정책의 대상인 ‘노동자’로만 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인들과 혼인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연인으로 지내기도 하며, 한국문화에 자신들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문화적 자원이기도 하다. 나아가 취업 후 자신들의 모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은 그 곳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주역들이 될 사람들이다.

필자가 조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현금으로 송금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건들을 사서 부치는데 더 열심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모국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가족이나 친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한국 물건들을 사보내는 일을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해 주는 무역 첨병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나 연수취업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 개선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할 외국인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싼값으로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세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눈앞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진로와 미래의 경쟁력을 준비하는 자세에서 외국인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다.